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한 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1/ 7 / 7 통권 1526호

CEO·CFO·COO · 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빛나는 대한민국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 박윤종 회계사 :

법인이 보유하던 주택 등의 매각과 개인아파트 매도의 세금차이)

### CFO·외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사업주는 8월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 부여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2 이상의 대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특정 법인에 대한 면제채무에 대해 손금산입 선택 가능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税計·經營 戰略

### < ESG 경영과 연관되는 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의 세무상 불이익 >

개념, 구분 등	구체적 내용, 관련 규정(법인세법 제52조) 기재내용 등
특수관계자의 범위	6촌 혈족, 4촌 인척, 배우자, 임원선임법인, 주주나 친족연합 지분 30% 이상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
규제 이유: 세금유탈	법인이익을 침해하거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므로
부당행위유형	고가 매입, 고가 출자, 무수의 자산매입, 비용부담, 저가양도, 불공정 합병 · 분할, 금전 등의 영가제공, 자산 · 용역의 고가 차용, 다른 주주에 이익분여(전환사채 등 각종 회사채), 증자 · 감자 · 합병 · 분할 · 각종매자산증권의 이익분여 등
부당행위판정 (정상가격)	일반 경쟁적 시가와의 차이(가격, 이자율, 효율, 임대료, 교환비용 등) • 제3자 가격, 감정가, 법정평가액(이자율은 연 4.6% 적용)
대손금의 손금부인 (법인세 납부효과)	① 법인세법 제19조의2, 중소기업 매출채권 소멸시효 2년(특수관계대출채권은 제외 즉, 손금부인함) ② 특수관계자 등의 가지금금은 대손금 불인정, tax effect 없음.
손금부인, 익금산입 (소득처분)	① 주주 등에 귀속: 손금부인 후 배당소득과세 ② 임원 · 직원 귀속: 손금부인 후 상여소득과세 ③ 법인 · 사업자에 귀속: 손금부인 후 기타사외유출(과세된 경우만) ④ 상기 이외 기타의 귀속: 손금부인 후 기타소득과세 ⑤ 귀속불분명금액: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재직기간 배분)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 · 경리 · 세무 · 재무 · 인사 · 노무 · 총무 · 법무 · 기획 · 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 · 교육 · 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주안세 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26 호 / 주간 27호

2021. 7. 7. (수)

· 발 행 인 : 이 윤 연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7575  
팩스: (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3988  
팩스: (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9761  
팩스: (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2427  
팩스: (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지원
- ⑩ 세무·회계·재경교과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ESG 경영과 연관되는 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의 세무상 불이익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법인이 보유하던 주택 등의 매각과 개인아파트 매도의 세금차이	2
C E O 에 세 이	빛나는 대한민국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고정자산, 퇴직금 질문입니다 - 행사관련 비용 계정 문의 - 비거주자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 우리사주 인출금 회계처리문의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사업주는 8월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요	9 10
직 장 인 Survival	말 실수를 줄이는 법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종교의 보금, 그 밖에 교회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 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 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인-2105, 2020.05.26)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등 일부 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호 이상의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등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법인-2950, 2021.01.04)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7월부터 최대 50% 감면	14
마케팅 Tax consulting	2 이상의 대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특정 법인에 대한 면제채무에 대해 손금산입 선택 가능성	12
세 무 정 보	-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 부여	15 41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 준·재정환율	4

# 법인이 보유하던 주택 등의 매각과 개인아파트 매도의 세금차이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개념구분	일반 개인 보유분	주택판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인 경우
과세방향	1주택 유도, 다주택 중과	계속적, 반복적 사업	비업무용으로 불이익 많음
취득세율	최초 1주택 : 1~3%, 2주택 8%, 3주택 12%	좌동	어떤 경우도 12%
국민주택규모 (85㎡)	토지, 건물 부가세 없음	좌동	좌동
국민주택규모 이상, 건물 양도시	비사업자이므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발행 안함	토지는 면세(계산서 발행은 면제) 건물은 세금계산서 발행	좌동
건물 가액	별도구분실익없음	건물의 중고시세가 액과 10% 부가세를 별도 구분기재양도	좌동 (토지상당액과 건물중고시세 구분)
기준 시가 안분	구분 필요없음	토지공시가와 건물 기준시가비로 안분	토지공시지가 거래가액 × $\frac{\text{토지공시지가} + \text{건물기준가}}{\text{가} \times 110\%}$ = 토지금액, 나머지는 건물가와 10% 부가세임
양도소 득	총 차익(총거래액 - 취득원가)	건물 해당액의 10%만큼 부가세를 납부하므로 양도차익 (양도소득)은 부가세 해당액만큼 감소함	

# 빛나는 대한민국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국민사기진작용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문재인대통령의 지난 발언이 순수한 위로로 들리지 않았던 것 같다.

"눈가리고 아웅식의 매표(賣票)용 재정정책이 될 수 있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등 곳곳에서 지적이 쏟아졌다. 나라곳간이 넉넉한 것도 아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교수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국민에게 잔뜩 빚을 지우고선 선심쓰듯 위로하겠다는 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나라빚은 국가부채(D1)나 일반정부부채(D2)나를 구분해 봐야 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채무를 더한 값이다. 반면 OECD나 IMF(국제통화기금)에서 국가간 건전성비교를 위해 활용하는 기준(GFS-PDS)은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부채로 이를 D2라고 한다. 또 기축통화국이나 비(非)기축통화국이나를 구분 검토해야 한다. 기축통화국의 부채비율은 95.77%지만 비기축통화국은 53.27%다. 비기축통화국들이 훨씬 보수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기축통화국 평균과 우리나라 부채비율(44.41%)의 격차는 불과 4.86%에 불과하다.

안동현 서울대경제학부 교수의 주장대로 "문제는 부채규모보다 증가속도"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폭을 보면 한국은 7.63%포인트로 OECD평균 9.87%포인트에 비해 낮다. 문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증가폭의 경우 한국은 16.55%포인트로 OECD국가중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이다.

2025년 한국의 D2는 64.96%로 비기축통화국중에서 이스라엘과 핀란드 다음으로 부채대국 3위가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충당부채는 향후 큰 부담이다. 또 여기에 고령사회와 인구감소가 가속될 경우 국가채무상환도 그만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구체적인 인식과 상환계획이 문재인정부는 없다는 것도 선진국 독일 앙겔라 메르켈정부와 다르다는 점이다. 나라빚만이 문제가 아니다.

가계빚 증가도 놀라울 정도다. 가계빚이 처음으로 1,7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은 지난해말 가계신용잔액을 1726조1,000억원으로 집계했다고 2월23일 밝혔다. 가계부채추이를 보면 2016년 1342조원이 2020년 1726조원으로 384조원이 증가했다. 지난해말 가계신용잔액도 2019년보다 125조8000억원이 늘어났다.

지난해 '코로나버블(거품)'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집값과 주가가 들썩이자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 중에도 신용대출로 투자금을 마련해 주식시장에 뛰어든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만일 앞으로 급등했던 집값이나 주가가 급락하면 막대한 빚을 얻어 집이나 주식을 산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 될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나라나 가계나 새삼스레 정신차리지 않으면 안 될 국면이다.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6월 25일 (금)	6월 28일 (월)	6월 29일 (화)	6월 30일 (수)	7월 1일 (목)
미	달	러 (USD)	1135.80	1128.80	1129.90	1130.00	1129.50
일	본	엔 (JPY)	1024.40	1018.82	1021.56	1022.12	1016.65
캐	나	다 달 러 (CAD)	921.92	917.98	915.64	911.25	911.44
홍	콩	달 러 (HKD)	146.30	145.43	145.55	145.55	145.47
위	안	화 (CNH)	175.23	174.56	174.77	174.84	174.86
유	로	화 (EUR)	1355.12	1347.67	1347.46	1344.42	1339.47
호	주	달 러 (AUD)	861.33	856.31	854.94	848.86	847.24
싱	가	폴 달 러 (SGD)	845.97	840.73	841.48	839.96	839.71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3.03	271.61	272.53	272.19	272.07

## 고정자산, 퇴직금 질문입니다

**Q**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를 하려고합니다  
수년동안 안 해오다가 올해부터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19년까지 안한 감가상각비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정리하고 조정에서 빼는건지 알고싶  
습니다.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려 하는데요. 19년 이전 설정 안한 퇴직금은 회계처  
리와 조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1.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당해 사업연도에 중대한 회계적 오류로 보아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기타)처분하는 것입니다. 또  
한, 상기의 세무조정과는 별개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한 감가  
상각비를 합산한 금액을 시부인하여 당해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입니다.  
2.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회계반영하여도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이 전액 손금부인됩니다.

## 행사관련 비용 계정 문의

**Q** 1. 본 병원에서 병원 캐릭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공모전에서 선정된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행사를 진  
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정된 캐릭터를 인형으로 제작하여 병원 곳곳에 비치하는 등으로 사용  
할 예정입니다.  
2. 질문  
가. 본 공모전에 사용되는 비용을 행사비 계정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나. 선정된 캐릭터를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A** 비용 계정은 법인이 사용목적에 맞게 반영하면 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행사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  
시면 됩니다.

### 비거주자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Q

양도인: 일본 법인(비거주자)

양수인: 내국인

일본 법인이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수 받으려고 하는데 이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세율, 그리고 양도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법률(조문)을 알고 싶습니다. 양도인이 비거주자라 거주자와는 다른 부분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를 하는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가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의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와 소득세법 제121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우리사주 인출금 회계처리문의

Q

현재 우리사주 인출금 과세부분에 대하여 소득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소득처리 후 실제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 내용 전표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과세(급여 및 상여 등 기타 유사계정과목) 으로 전표입력시 대체계정은 어떤걸로 입력해야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통상적인 관점에서 요청드리며, 과거에 이와 유사하게 처리했던 내역은 없습니다)

A

우리사주인출금은 법인의 거래가 아니고 임직원 개인의 거래내역이므로 법인은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없습니다.

# 사업주는 8월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이 되는 매년 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주이다(지방세법 § 75②).

임대사업자 등으로부터 건축물을 임대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이 임대인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임차인이 된다. 단, 임차인(1차 납세의무자)이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해 임대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어 부담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과징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다.

##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업주가 1년분의 주민세 사업소분을 모두 부담하는바, 7월 2일 이후에 새로이 사업소를 설치한 경우라면 7월 1일이 이미 지났으므로 당해 연도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는 없다.

또한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소를 폐지한 경우에도 7월 1일에는 사업장이 없으므로 2021년의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사업소를 폐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매년 7월 1일 현재에 1년 이상 휴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가 없다.

##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대상 및 면세점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사업소인데, 사업소의 연면적이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대상이다.



사업소연면적이란 사업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하는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이다.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구내이발소·탄약고 등은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등의 시설물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계산하며, 2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적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과세대상이 된다.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재산분이 면세되는데, 사업소 전체면적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이다.

##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율(5만원~20만원)에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더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세율은 다음과 같다

### ① 기본세율

개인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5만원
법인	자본금 30억 이하	5만원
	자본금 30억초과~50억이하	10만원
	자본금 50억 초과	20만원

### ② 연면적에 의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및 가산세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자진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지연일수×10,000분의3)도 가산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R&D비용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 · 원천기술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반	1	3	2~3	3
신성장 · 원천기술	3	5	12	3
국가전략기술	6	8	16	4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표준세율 (공시 9억 초과 주택 · 다주택자 · 법인)	특례세율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 가가 9억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 효과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05%	~3만원 (인하율 50%)
0.6~1.5억 이하 (공시 1~2.5억)	6만원+ 0.6억 초과분의 0.15%	3만원+ 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1.5~3억 이하 (공시 2.5~5억)	19.5만원+ 1.5억 초과분의 0.25%	12만원+ 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억 초과 (공시 5억 초과)	57만원+ 3.0억 초과분의 0.4%	42만원+ 3.0억 초과분의 0.35%	15~27만원 (17.6~26.3%)



##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요

구분		심리·의결	결정
과세 前	과세전 적부 심사	지방세 심리위원회 (절차 생략가능)	시·군·구세 : 시장·군수·구청장 도세 : 도지사
과세 後	이의신청	"	"
	심사청구	" ※ 도세 : 없음	시·군·구세 : 도지사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회의	조세심판관
	심사청구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감사원
	행정소송	판사	판사



## 주요 퇴직연금 유형

유형	정의	비고
DB (확정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에 퇴직급여 확정하는 제도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지급</li> <li>원금보장, 수급권 보장이 장점, 연금소득세(3.3~5.5%) 부과</li> </ul>	중도인출 불가능, 납입금잔액의 일정 조건에 대해 50%까지 담보대출 가능
DC (확정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에 회사 납입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을 확정해 근로자에게 정기 지급</li> <li>근로자 자신의 퇴직연금 운용, 그에 따른 손익이 퇴직급여에 반영, 손실도 본인 책임, 연금소득세(3.3~5.5%) 부과</li> </ul>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요양 등 법정사유 빼고 중도인출 불가. 해지하면 전액인출 가능
IRP (개인형퇴직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운용 가능한 퇴직연금. 다양한 금융상품 가능</li> <li>분할투자 가능, 세제혜택(13.2~16.5%, 세액공제 한도 연 700만원)</li> </ul>	



## 말 실수를 줄이는 법

01. 상스러운 말은 하지 마라.  
욕이나 비하하는 말 가운데 가장 낮은 하수다.
02. 상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누구나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있다.  
그 말은 뇌관이다. 건드리면 폭발한다.
03. 남과 비교 하는 말은 피하자.  
3살 먹은 아이부터 80살 먹은 노인까지 남과 비교하는 말은 듣고싶지 않아한다.
04. 인격을 무시하는 말로 공격하지 마라.  
자존심을 건드리면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  
두고 두고 원망만 들을 뿐이다.
05. 상대 가족을 헐뜯지 마라.  
본질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상대의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건드리지 마라.
06. 폭탄선언은 참아라.  
“우리 헤어져”, “이혼하자”, “사표를 내야지” 등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마지막에 하는 말이다.
07. 유머있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  
무슨 이야기든 진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
08. 분명한 말은 오해를 남기지 않는다.  
확실한 예스와 확실한 노는 연습해야 잘 할 수 있다.
09. 비비 꼬는 파배기 말은 하지 마라.  
마음이 꼬여 있을 때는 침묵 하는게 낫다.
10.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는 말도 있다.  
말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이 되기도 하고, 명약이 되기도 한다.

# 최 신 판 례 예 규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인-2105, 2020.05.26

## ■ 질 의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단체임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Marketing Tax consulting

2 이상의 대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특정 법인에 대한 면제채무에 대해 손금산입 선택 가능함

내국법인A와 B의 금융채권자가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 중 A법인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법령법인-1395, 2020.11.27

## ■ 질 의

-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해 채무를 면제한 금융채권자가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A·B법인) 중 A법인만 선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의 손금산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내국법인A와 B의 금융채권자가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금융채권자는 그 내국법인 중 A법인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발전사업자가 가동이 제한된 석탄발전기에 대하여 신청법인이 급전지시 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유지비 등을 보전받기 위하여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지급받는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법령부가-1100, 2020.11.30

## ■ 질 의

-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에게 가동이 제한된 석탄발전기의 비상대기 상태 유지에 따른 '비상대기에비례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 회 신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기후·환경 제약에 의해 가동이 제한된 석탄발전기에 대하여 한국전력거래소가 급전지시 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대

기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그 유지비 등을 보전받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지급받는 비상대기예비력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등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호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법인-2950, 2021.01.04

#### ■ 질 의

- A법인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 2016년 7월경부터 2개 지역에서 2,231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았음
- A법인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중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예정으로, 양도 이후에도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8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임대할 예정임

#### 질의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기 감면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제1호가목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나목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임대하여 같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던 중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등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한 이후에도 1호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망대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846, 2021.01.06

#### ■ 질 의

전망대 초대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회 신

전망대 초대권을 소지한 자가 전망대 매표소에서 해당 초대권을 제시하고 전망대에 들어가는데 필요로 하는 입장번호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7월부터 최대 50% 감면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0.6억 이하(공시 1억)의 경우 이전보다 50.0% 감면하며, 금액으로는 약 3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

0.6~1.5억 이하(공시 1억~2.5억)는 38.5~50.0%가 줄어 3~7.5만원 정도가, 1.5~3억 이하(공시 2.5억~5억)은 26.3~38.5%가 감면돼 7.5~15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

3~3.6억 이하(공시 5억~6억)의 경우 22.2~26.3%가 감면돼 15~18만원 정도 세금이 낮아진다.

1사업연도의 공급대가로 지불한 돈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에서 제외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공급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지난해 구매대행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해외직구 대행업자(통신판매업자)는 세관의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제도 시행 당시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등록을 유예한다.

기존에 재산분을 7월에 납부하던 사업주(개인사업자·법인)와 균등분을 납부하던 사업주(개인사업자·법인)는 사업소분으로 8월 한달 사이 신고납부하면 된다.

### 기부금 영수증, PC 모바일로 받으면 연말정산까지 끝

7월부터 온라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시행에 대해 안내했다.

기부금단체는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별도로 세무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법

정서식 보관·제출 의무에서도 면제된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 내역이 투명해져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6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한 결과 15만명이 참여했고, 전자기부금영수증 650만 건이 발급됐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발급·조회가 가능하며, 기부자는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행정안전부 '1365기부포털'을 통해 자신이 기부한 단체의 공익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홍보를 강화하고 편의기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회계사회, 비상장사 회계처리... 특수관계자 거래 등 집중점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회계사회)가 2021 회계연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 관련 중점 점검 회계이슈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점점검 대상은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및 주식 공시 적정성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회계처리 적정성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 적정성 등이 중점 점검 분야다.

회계사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회사 등 제외)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회계사회는 2021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사전 안내한 회계이슈별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진행한다.

회계사회 측은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재정부, 2021. 6

□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금융·재정·조세)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0.05%p↓),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

\* 홈텍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별도 제출 불필요, 거짓영수증 방지

\*\* (소득요건) 8→9천만원 이하, (가격요건) 투기과열지구 6→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8억원 이하, (LTV 우대혜택) 요건충족시 10→20%p

○ (교육·보육·가족)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등 현장실습 개선, '학교 밖 청소년' 공적지원체계 연계 확대 등

\* 직무부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자 실습지원비 지급(최저임금의 75% 이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유급 원칙(예외적 무급운영 허용)

○ (보건·복지·고용)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50인→5인 이상), 코로나19 백신 국내개발 가속화 지원\*\*\* 등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단계 개통 + 복지포털('복지로') 개편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도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수급 가능

\*\*\*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 제정

○ (환경·기상)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시행,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확대\*\*





- \* 전국 공동주택 지역('20.12월) → 전국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21.12월)
- \*\* 녹색기업, 환경영향이 큰 기업, 공공기관 등(기존) → 자산총액 일정규모 이상 주권상장법인도 포함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
- \* (현행) 발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거래 → (변경)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에게 공급
- \*\* 권리자의 생산능력 초과 판매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로 손해배상
- (국토·교통)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 \* 계약 체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농림·수산·식품) 미주향로 임시선박 투입확대\*로 수출 물량 적체 완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발급: '22년~) 등
- \* '20.8월 이후 임시선박 월 평균 2척 → '21.7월부터는 매주 1척 투입 예정
- \*\* 수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21년 1만톤 이상 → '24년 모든 해외제조업소),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만 수입 가능
-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최종단계까지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 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
- (국방·병무) 장병내일준비적금\* 1% 우대금리 지급,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시행\*\*, 병역진로 설계 지원센터 확대 운영,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 \* 전역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자유적립식 정기적금('21.3월 기준 약 31만명 가입)
- \*\* (기존)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 → (변경)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귀가제도는 폐지)
- (행정·안전·질서) 외국인 국내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 수사,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등
- \*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 마련(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 또는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행위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 주정차 금지(통학용 차량 승하차 예외)
- 책자는 7월 초부터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천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 6월 28일(월) 10:00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 > 정책자료 > 발간물)에 게시되어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으며,
- 7월 10일경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편리한 검색 및 담당부서 확인이 가능하다.

## 기획재정부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 분기 → 매월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 매월

■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부담을 경감합니다.

#### ▶ 추진배경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 ▶ 주요내용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월로 단축
- 가산세 부담 경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미제출 : 1% → 0.25%, 지연제출 : 0.5% → 0.125%)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 가산세 면제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제외

####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소액수의계약 한도상향

수의계약의 금액한도가 상향되어 수의계약 체결이 이전보다 용이해집니다.

■ 한도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종합공사) 2억→4억 (전문공사) 1억→2억 (기타공사) 0.8억→1.6억
- (소기업 · 소상공인 물품 · 용역) 0.5억→1억
- (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 · 용역) 0.5억→1억
- (여성 · 장애인 · 사회적 기업) 0.5억→1억

■ 개정내용은 금년 7월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 추진배경 : 제도 유연성 강화 및 경제적 여건 변화 감안
- ▶ 주요내용 :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시적 특례\* 수준으로 상시화
  - \* 현재 "코로나 대응을 위한 특례고시('20.5)"를 통해 특례 적용 중
    - (종합공사) 2억→4억 (전문공사) 1억→2억 (기타공사) 0.8억→1.6억
    -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 0.5억→1억
    - (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용역) 0.5억→1억
    -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0.5억→1억
- ▶ 시행일 : 2021년 7월초

## 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공공계약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입찰·계약보증금 대신에 국가계약법령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계약법령이 인정하는 지급보증서 발행가능 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추가하여 중소해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 ※ 민간보증기관(계약보증요율 : 0.54%, 입찰보증요율 : 0.03%) 대비 약20~30% 낮은 보증수수료

■ 개정내용은 금년 7월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 추진배경 : 중소해운기업 부담완화
- ▶ 주요내용 : 입찰·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
- ▶ 시행일 : 2021년 7월초

##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등 확대

국가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최소 금액기준도 완화하여 분쟁조정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합니다.

- 조달기업은 기존 분쟁조정 대상외에 ①계약보증금 국고귀속, ②개산계약 등의 정산, ③계약해제·해지시 다툼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 기존 분쟁조정 신청시 최소 금액기준도 대폭 하향(종합공사 30 → 10억원, 전문공사 3

→ 1억원, 물품·용역 1.5 → 0.5억원 등)되어 조달기업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 ▶ 조정대상:(현행:7개) 입찰자격, 낙찰자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 (추가:3개) 계약 보증금 국고귀속, 개산계약 정산, 계약해제·해지
- ▶ 금액기준:(종합공사) 30억→ 10억, (전문공사) 3억→ 1억, (물품·용역) 1.5억→ 0.5억

■ 개정내용은 금년 7월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행정안전부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 세율이 0.05%p 인하됩니다.  
('21.7월·9월 부과)

- ▶ 추진배경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국토부, '20.11월)와 함께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 추진
- ▶ 주요내용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 세율을 0.05% 인하

과표	표준 세율(공시 6억 초과·다주택자· 법인)	특례 세율(공시 6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공시 1억)	0.1%	0.05%	~3만원	50.0%
0.6~1.5억 이하(공시 1억~2.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0%
1.5~3억 이하(공시 2.5억~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3.6억 이하(공시 5억~6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18만원	22.2~26.3%
3.6억 초과(공시 6억)		-	-	

-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재산세 부과는 7·9월)



##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舊재산분**과 **舊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

■ 기존에 재산분을 7월에 납부하던 사업주(개인사업자·법인)는 사업소분으로 8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기존에 균등분을 납부하던 사업주(개인사업자·법인)는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주민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분부터 적용됩니다.

- ▶ 추진배경 : 주민세의 복잡한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 및 납기 통일을 통해 납세 편의를 증진할 필요
- ▶ 주요내용
  -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체계를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체계로 전면 개편
  - 사업소분 납기를 7월→8월로 조정하여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부과지 대상이던 기존 개인사업자균등분·법인분을 신고납부로 전환
-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주민세 신고·납부는 8월)

---

## 국세청

---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 「소득세법」 제81조의7 제1항 개정, 2021.7.1. 시행)

■ 시스템 개통 :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21.4.1.~6.30.) 후 2021년 7월 1일 정식 개통합니다.

■ 제도 효과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

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써,

- 기부자의 전자기부금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반영되므로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 기부금단체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되며,
-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발급권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거짓영수증 발급을 방지함으로써 기부문화가 투명해집니다.

- ▶ 추진배경 : 기부금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관리하여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거짓영수증 발급근절 등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 주요내용 :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부금단체 투명성 강화
-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 1억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중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 1)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2)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1) 1월 1일부터 6월 30일 2)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을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서 [매입액(공급대가) × 0.5%]로 변경하였습니다.

-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소규모 자영업자의 거래 투명성 확보,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1억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부여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받은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sup>1)</sup>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부과기한<sup>2)</sup>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 1) 1월 1일부터 6월 30일 2)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매입액(공급대가) × 0.5%]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 가산세 규정 통합·정비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의 가산세를 부과\*
    - \*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 준용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관세청

###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

2021년 7월 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19. 12. 31.개정 「관세법」 시행).

-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며,
- 등록제도 시행 당시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여 1년간 등록이 유예됩니다.
  - ※ 등록방법 : 구매대행 물품의 통관지 세관장에게 '등록신청서' 제출
- ▶ 추진배경 :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 ▶ 주요내용
  -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의무등록제 시행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 금융위원회

---

###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21.3.30.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시행)

-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됩니다.

\*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 적용(대부업법 시행령, 금융위)

\*\*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적용(이자제한법 시행령, 법무부)

-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금리 이용차주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더불어,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병행 추진 합니다.

\* ①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3.31.), ② 대부업 제도 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 보호방안(4.1.), ③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4.26.) 발표

- ▶ 추진배경 : 저금리 기조에 따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
- ▶ 주요내용 :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





하

▶ 시행일 : 2021년 7월 7일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조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2021년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무주택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도 확대됩니다.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
- 가격기준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 우대혜택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이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됩니다.(4억원 한도 이내)
- ▶ 추진배경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 ▶ 주요내용 :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조건 완화 및 혜택 확대

구 분	현 행		개 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우대조건	무주택 세대주(공통)		무주택 세대주(유지)	
①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0.8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0.9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0억 미만	
②주택기준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우대수준			최대 4억원 한도(공통)	
①LTV	50%	60%	(~6억) 60% (6~9억 구간) 50%	(~5억) 70% (5~8억 구간) 60%
②DTI*	50%	60%	60%	60%
③DSR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 DTI는 차주단위 DSR 미적용 차주에 대해 적용(적용 차주는 DSR 적용)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이에 전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됩니다.
- ▶ 추진배경 :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단위 DSR을 '21.7월부터 단계적 확대 ▶ '23.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 적용
- ▶ 주요내용
  -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현 행	1단계('21.7월)	2단계('22.7월)	3단계('23.7월)
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①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총 대출액 2억원 초과(①/② 유지)	총 대출액 1억원 초과(①/② 폐지)
신용대출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②1억원 초과		

-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차주단위 DSR 적용 실익이 적은 대출은 적용 제외
-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

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상환부담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예) 3억원 대출(대출이자 2.85%) 시 월 상환금액은(30년만기) 124만원 → (40년만기) 105.6만원으로 14.8% 감소



■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은 2021년 7월 도입될 예정입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이 확대됩니다.

■ 총 4.1조원인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 · 지속 확대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됩니다.

\*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인하

■ 이를 통해 무주택 청년의 전세대출 비용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1억원 대출시 이자부담이 일반전세대출에 비해 연간 약 50만원(0.5%p) 감소  
보증료 추가인하를 통해 보증료 부담도 연간 5만원→2만원으로 감소

■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공공 전세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됩니다.

■ 주공공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을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하여 저렴한 공적보증의 이용대상을 확대합니다.

■ 보다 많은 분들이 저렴한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세보증금 한도 확대는 3분기 중 시행됩니다.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가 3.6억원까지 확대됩니다.

■ 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서민에게 제공되는 내집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지원한도가 확대됩니다.

■ 보금자리론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보금자리론을 통해 더 폭넓게 내집마련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금자리론 한도확대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 추진배경 :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비용부담을 경감
  - ▶ 주요내용 : ① 만 39세 이하의 청년·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40년 모기지 도입
    - \* 보금자리론(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도입
  - ② 청년 전용 전월세대출의 대출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하고 보증료 추가인하
  - ③ 주금공 전세대출 이용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를 7억원까지 확대
  - ④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를 최대 3.6억원까지 확대
- ▶ 시행일 : 2021년 7월 이후 과제별로 시행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년 6월 30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집단 차원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7월 31일까지 법 적용 대상인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예정입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집단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그 간 행정지도로 시행되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건전성 감독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법제화됩니다.

- 법 시행으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추진배경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 주요내용 :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감독, 금융복합기업집단 보고·공시 등
- ▶ 시행일 : 2021년 6월 30일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2021년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 송금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도 시행일(7.6일) 이후 발생한 건부터 신청 가능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다시 한 번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여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사후지급 방식)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홈페이지(kmrs.kdic.or.kr, 7.6일부터 접속 및 신청 가능)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1588-0037)

- ▶ 추진배경 :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비대면 금융 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
- ▶ 주요내용 :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송금인에게 지급
- ▶ 시행일 : 2021년 7월 6일

##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i)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 $\geq$ 총비용※' 이면서, (ii)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됩니다.

\* 경제적 이익 : 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여 산정

■ 다만,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i) "총수익 $\geq$ 총비용" 기준만을 적용합니다.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제조업 등) ~ 10억원 이하(음식점업 등)인 경우 (업종별 상이)

※ 총수익 : 연회비 + 법인회원의 카드이용에 따른 가맹점수수료(평균 1.8% 내외)  
 총비용 : 법인회원의 모집 및 카드 발급에 지출되는 비용 + 신용카드 이용에 지출되는 비용(결제승인·중계비용 등) +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합산

- ▶ 추진배경 :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가맹점수수료 부담 등을 경감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 ▶ 주요내용
  - 원칙 :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 (i)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 $\geq$ 총비용' 이면서,
    - (ii)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
  - 예외 :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 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i) "총수익 $\geq$ 총비용" 기준만 적용
-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2021년 7월 21일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 또한,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례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 소비자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추진배경 :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4년 (2+2)으로 제한되어 기간 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중단 우려가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샌드박스 5법 동시 개정 추진
- ▶ 주요내용 : 혁신금융사업자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 ▶ 시행일 : 2021년 7월 21일



## 고용노동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1. 적용직종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1. 적용범위		
적용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주요 적용제외		-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자('22.1월부터 합산 가능) - 만65세 이상(단, 만65세이전부터 고용보험 계속 가입중인 자는 적용 대상)
2. 보험료 징수		
보험료율		-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0.7%)
수급요건	기여요건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이직사유	- 비자발적 이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포함)
3. 구직급여 지급		
지급수준		-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 120일 ~ 270일
소득활동 인정		-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기여요건		-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지급기간		-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 ▶ 추진배경 :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 ▶ 주요내용 :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
-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20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21. 1. 5. 개정 「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특고 종사자가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  
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①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②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③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  
는 경우

■ 7.1. 시행시 기존 적용제외 특고종사자도 일괄적으로 다시 적용되며, 적용제외를 희망하는 특  
고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특고 적용제외 사유 제한으로 사업주 및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  
하여 한시적('21.7.1부터 1년간)으로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 경감제도를 시행합  
니다.

- ▶ 추진배경 :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이 높아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  
음
- ▶ 주요내용
  -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
-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현행 : 50인 이상 적용
  - 개정 : 5인 이상 적용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 ▶ 주요내용
  - 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업종별 단계적 시행
    - '18.7월 : 300인 이상(특례업종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은 '19.7월부터)
    - '20.1월 : 50~299인
    - '21.7월 : 5~49인
-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세부 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참조

-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추진배경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임금체불 관련 노사간 갈등을 예방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모
- ▶ 주요내용
  - 사용자가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임금명세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교부 가능
- ▶ 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추진배경 :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확대
- ▶ 주요내용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2021년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합니다.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아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 2021년 7월 1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원 상한)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 대규모기업 : 마지막 30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 :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 출산전후 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월 200만원 상한) 지원

- ▶ 추진배경 :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및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모성보호제도 활용 정착
- ▶ 주요내용 :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
-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1년 7월 6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됩니다.

■ 개정 노조법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가장 보편적 국제기준인 ILO의 결사의 자유 협약을 반영하면서도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분	개정내용
노동조합 가입 자격	- 해고자 등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비종사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 가능
비종사자인 노조 조합원의 노조활동 원칙	- 비종사자인 조합원은 사업장 내 노조활동시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타임오프 한도 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함
노동조합 임원 자격	-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노조 자체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음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 삭제 - 근로시간면제제도로 통합(일원화)하여 규율 ①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 ②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사용자 동의는 무효 ③ 사용자가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규율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편	-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의무 부여 -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신설
단체협약 유효기간	- 노사 합의로 최대 3년의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신설

▶ 추진배경 :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사관계 제도 개선

▶ 주요내용

-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조 설립·가입 가능
-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통합(일원화)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3년) /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선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원칙 확립

▶ 시행일 : 2021년 7월 6일

##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가 신설됩니다.

- 고용노동부에 재난 시 필수업무의 범위와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재난 시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상황에 맞게 필수업무종사자를 지정,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정의

- (필수업무) 재난 발생시 국민의생명·신체의 보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필수업무종사자)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절차



▶ 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2021년 11월 19일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21.5.18. 개정 「근로기준법」).

■ 개정법은 11월 19일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 등부터 적용됩니다.

■ '원직복직,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대해 최대 2년간 총 4회, 각 3천만원 한도 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 이를 통해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추진배경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력 강화
- ▶ 주요내용 :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 ▶ 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

-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추진배경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 주요내용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
  -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 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20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근로자도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21.4.13.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 또한,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면 소액채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1년 10월 14일부터 "채당금"이라는 용어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됩니다. ('21.4.13.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 추진배경 체불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소액채당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절차 간소화

▶ 주요내용

- 소액채당금 지급대상 확대: (현행) 퇴직자 → (개정) 퇴직자 및 재직자
- 소액채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현행)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소액채당금 지급(약 7개월 소요)
  - (개정)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액채당금 지급(약 2개월 소요)

▶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지자체에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하고, 지자체 장이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추진배경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및 관할지역 내의 산재예방 대책수립·시행 책무를 규정
- 산재예방 계획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정부의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021년 7월 16일 부터 적용·시행 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6일부터 기시행

- 따라서, 변경된 규정량\*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PSM 규정량 조정(산안법 시행령 별표13 개정)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 18종, 상향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 또한 부식성 액체(염산, 황산, 암모니아수 등) 농도기준 조정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 중대 산업사고예방센터)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 추진배경 : 공정안전보고서 대상물질 규정량을 유해·위험성 및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
- ▶ 주요내용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별표 13)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강화) 18종, 상향(완화)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 ▶ 시행일 : 2021년 7월 16일(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2021년 6월 9일부터 산재노동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 과다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2 신설

- 산업재해 후 발생한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산재노동자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하면, 심사를 통하여 과다 청구된 금액을 의료기관이 환불하도록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환불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

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요청한 사람에게 환불하여 드립니다.

- ▶ 추진배경 : 산재노동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해당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권리구제 및 경제부담 완화
- ▶ 주요내용
  -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공단에 확인 요청
  -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과다하게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공단에서 반환
- ▶ 시행일 : 2021년 6월 9일

---

## 중소벤처기업부

---

###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 포함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성과보상공제사업인 내일채움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해당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 ▶ 추진배경 :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 완화 및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 해소 필요
- ▶ 주요내용
  - (가입대상 확대) 성과보상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포함
    - \* 가입대상 : (기존) 중소기업 → (변경) 기존 +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의료법인 및 의료비영리법인
- ▶ 시행일 : 2021년 10월 21일





## 유럽진출 온라인 스마트그린비즈니스센터(V-SGBC) 운영

우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온라인 스마트그린비즈니스센터(Virtual SGBC)가 운영됩니다.

- '20년 12월,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와 룩셈부르크 경제부와의 MOU 체결로 '22년 룩셈부르크 SGBC가 설립될 계획입니다.
- '22년 설립에 앞서, '21년 6월부터는 온라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인 Virtual SGBC를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여, 코로나19에 의해 위축된 우리기업의 유럽진출을 도와드립니다.
- 현지 정착을 위해 기업 및 기관과 B2B 매칭 정보 제공과 유럽시장 수요조사 및 현지법인화 행정절차 등 관련정보도 안내해 드립니다.
- Virtual SGBC는 우리 중소기업의 그린·디지털 전환과 유럽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센터로, 한국의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와 룩셈부르크의 룩셈부르크혁신청이 공동운영 합니다.

#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 부여

- 국세청, 2021. 6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전자고지가 활성화 되도록 올해 7.1.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습니다.
  -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하여 계좌이체 등으로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전자고지 신청은 손택스 앱1) (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2)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 1) [신청·제출]→[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전자고지 신청/해지]
  - 2) [신청/제출]→[신청업무]→[전자고지(송달) 신청/해지]
-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수 있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

###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의의)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는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 (취지) 등 제도는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전자고지 제도



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전자고지는 납세자가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으며,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국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또한 우편 고지서 발송량이 감소되어 예산이 절감되고 종이 사용량이 감축되어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 (대상세목)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입니다.

■ (공제시기)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받는 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예시1)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는 '21년 8월 말까지 신청 필요

\* (예시2)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는 '21년 9월 말까지 신청 필요

■ (공제금액)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국세 고지서 건당 1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고지금액 최저한도(1만 원)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1천 원을 차감한 금액이 1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으로 고지됩니다.

\* (예시) 납부세액이 10,900원이면 900원 공제되고 10,000원이 고지

## 2

## 모바일로 국세 고지서를 편리하게 받고 납부하세요

■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국세 고지서를 열람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국세 고지서 도착을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고지내역을 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세금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3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고지를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전자고지를 이용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자고지 신청(국세기본법 제10조⑧에 규정)을 하여야 합니다.
  -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우편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 －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을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 해지되므로 기한 내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전자고지 신청 방법 〉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필요) : ① 손택스 접속(인증서·생체인증 필요) → ② 신청·제출 → ③ 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 → ④ 전자고지 신청/해지
- 홈택스(www.hometax.go.kr) : ① 홈택스 접속(인증서·생체인증 필요) → ② 신청·제출 → ③ 신청업무 → ④ 전자고지 신청/해지
- 서 면 :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또한, 손택스 푸시\* 수신을 동의한 납세자에게는 전자고지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간편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 푸시(PUSH): 수신 동의한 손택스 앱 설치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술

- － 납세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세액공제 대상세목의 고지서 송달 2개월 전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 모바일 전자고지 간편신청 안내 〉

- 안내흐름 : ① 푸시 알림메시지 수신 → ② 전자고지 신청 안내 화면 → ③ 손택스 접속(인증서·생체인증 필요) → ④ 전자고지 신청/해지
- 안내대상 : 최근에 세액공제 대상세목\*의 고지서를 수령한 손택스 푸시 동의자 등
  - 부가세 예정고지,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

### 4 전자고지 서비스는 더욱 편리하게 발전합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전자고지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한편
  - 바쁜 일상으로 인해 고지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납부기한 알림 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 \* 손택스 푸시 수신동의한 납세자에게 납기 3일 전에 안내
-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 사실을 받아 볼 수 있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1 -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 이용방법

### ■ 서비스 개요

구분	내용
서비스 대상	개인, 개인사업자(법인은 제외)
대상 세목	모든 국세
서비스 개시	'20. 12. 22. (화) 부터

### ■ 서비스 흐름 ① 카카오톡·문자 수신 → ② 본인인증 → ③ 전자고지 열람 및 납부

#### ①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 받음

- 국세청은 전자고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카카오페이·KT를 통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할 수 있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
- 카카오페이 가입자의 경우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에게는 통신3사(SKT, KT, LGU+)의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다만, 2G폰, 일부 알뜰폰, 같은 통신사에 동일 명의 휴대전화가 2대 이상인 경우 등에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할 수 없음
  - \* 위의 사유로 모바일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전자고지를 확인하도록 문자 안내

#### ② 본인인증만으로 고지서 열람

-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고지서 열람 가능
  - \* 카카오페이 가입자의 경우 카카오페이 인증서로, 미가입자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또는 통신3사의 PASS인증 (PASS 앱 설치 필요)으로 가능
- 열람기간은 고지서 발송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열람기간이 경과한 경우,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고지서 확인 가능
  - \* 홈택스(손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전자고지 열람 → 전자납부번호 클릭

#### ③ 열람 후 바로 세금 납부 가능

- 은행 등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서 고지서 확인 후에 모바일지로 앱(금융결제원)을 통해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세금 납부 가능

-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삼성페이·페이코,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지로납부하기: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에 선택하여 전액 납부만 가능
- 손택스납부하기: 납부할 세액 조회 후 전액 납부, 일부 납부 선택 가능
- \* 신용카드별 이용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납부세액을 수정하여 일부 납부하는 경우, 미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에 유의

---

## 붙임 2 - 전자고지 신청 및 신청여부 확인방법

---

### 1. 신청방법

-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필요)에서 신청
  - ① 손택스 공동인증서 로그인
  - ② 전자고지 신청 메뉴로 이동
  - ③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신청
-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 ①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② 신청/제출 → 전자고지(송달) 신청/해지 클릭
  - ③ 전자고지 신청 화면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신청

### 2. 신청여부 확인방법

-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필요)에서 신청여부 확인
  - 손택스 나의정보의 [회원정보]에서 [전자고지 신청일]을 확인
-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여부 확인



### 붙임 3 - 자주 묻는 질문 (FAQ)

#### 1. 전자고지 세액공제는 모든 고지서에 적용되는지?

-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만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2. 전자고지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 ☐ 국세 고지서 건당 납부세액에서 1천 원을 세액공제합니다.
- 단, 고지금액 최저한도(1만 원)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1천 원을 차감한 금액이 1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으로 고지됩니다.
  - \* (예시) 납부세액이 10,900원이면 900원 공제되고 10,000원이 고지

#### 3. 전자고지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 ☐ 전자고지를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받는 고지서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 (예시1)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는 '21년 8월 말까지 신청 필요
  - \* (예시2)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는 '21년 9월 말까지 신청 필요

#### 4. 전자고지 신청방법은?

-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손택스·홈택스를 통한 전자고지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신청화면 접근경로	비 고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제출]→[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전자고지 신청/해지]	· 손택스앱 설치 필요 · 인증서·생체인증 로그인
홈택스(PC)	[신청/제출]→[신청업무]→[전자고지(송달) 신청/해지]	· 인증서·생체인증 로그인

## 5.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전자고지 열람은 어떻게 하는지?

- ☐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자고지 안내문을 받고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고지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알림메시지 발송 시점: 고지하는 다음날 안내하며,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으면 2회 추가 안내(고지일+15일, 납기 3일 전)
- 또한, 손택스(모바일 앱)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언제 어디서나 전자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 6.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전자고지 신청 해지가 가능한지?

- ☐ 전자고지 신청 해지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손택스·홈택스를 통한 전자고지 해지방법 〉

해지방법	해지화면 접근경로	비 고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제출]→[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전자고지 신청/해지]	· 손택스앱 설치 필요 · 인증서·생체인증 로그인
홈택스(PC)	[신청/제출]→[신청업무]→[전자고지(송달) 신청/해지]	· 인증서·생체인증 로그인

## 7.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 ☐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고지를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에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8. 전자고지 신청을 해지(자동해지 포함)한 경우 재신청하려면?

- ☐ 전자고지 신청이 해지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전자고지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번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li> </ul> </li> <li>○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li> </ul> </li> <li>○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단 생략)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li> </ul> </li> <li>○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⑤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징수하는 소득세</li> <li>2. 「부가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징수하는 부가가치세</li> <li>3. 「국세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부가 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ul> </li> <li>⑥ 제5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각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국세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li> </ul> </li> <li>○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⑦ 법 제104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을 말한다.</li> </ul> </li> </ul>